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 동향과 전망

1997. 6.

허 문 영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민족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만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 목 차 -

I. 문제제기	1
II. 김일성 사망 이후 대외정책 특징: 이념중시적 외교의 조정	3
1. 유인외교 전개	4
2. 안보외교 강화	5
3. 도입정책 추진	5
III.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 동향	6
1. 정통성 강화 외교: 대미관계 개선 및 대외선전 지속과 ‘잠수함 사건’ 사과	6
2. 유효성 제고 외교: 도입정책 지속과 국제기구 진출 시도	9
3. 통제성 확보 외교: 봉남정책 지속	11
4. 연대성 보장 외교: 유인정책 강화	12
IV.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향후 김정일 정권의 대외정책 전망: 실리중시적 외교의 추진	15
1. ‘3대혁명역량’ 편성 상황	15
2. 김정일 정권의 대외정책 전망: 개혁없는 개방정책	17

I. 문제제기

- '90년대 들어와 북한은 소련의 해체, 한국의 북방외교, 국제사회의 핵사찰 압력 등으로 인해 경제난 심화, 외교적 고립, 안보난 가중의 3중고를 겪게 됨.
 - 이런 가운데 김일성이 사망('94.7.8)하자,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기적 상황에 돌입하게 되었음.

- 이에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정책기조로서 비상(非常)·통미·접일·맹중·연러·봉남 노선을 추구한 것으로 평가됨.
 - 대내적으로 군부주도의 비상위기관리체제를 통해 체제안정을 꾀하는 한편,
 - 대외적으로는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거부한 채 대외관계 개선에 주력하였음.
 - 「북·미 기본합의문」 채택('94.10.21)
 - 「북·일회담 재개를 위한 합의서」 채택('95.3.30)
 - 「경수로공급협정」 체결('95.6.13)
 - 「북·중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96.5.22)
 - 「북·러 신기본조약」 체결 협상('97.1.21~25)

- 한편 '97년에 들어와 북한은 대만 핵폐기물 반입추진(1.11), 4자 회담 공동설명회 참석(3.5), 북·미 준고위급 회담 개최(3.7), 전방

위 식량외교 전개와 더불어 활발한 초청 및 방문외교를 전개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김일성 사후 3년 동안 북한이 추구해 온 대외정책을 종합분석하고, 향후 김정일 정권이 공식출범할 경우 선택하게 될 대외정책 기조를 전망하고자 함.

Ⅱ. 김일성 사망 이후 대외정책 특징: 이념중시적 외교의 조정

-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이데올로기 중시의 자주외교 정책레짐을 현실적응·실리추구적 차원에서 조정해 온 것으로 평가됨.
 - 국가목표에 있어 공산화통일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체제유지에 보다 주력함.
 - ‘자주·평화·친선’의 기존 대외정책 이념을 지속하였으나, 그 내용을 달리 제시함으로써 변화하는 대내외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함.
 - ‘자주’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과 유엔 개혁’을,
 - ‘평화’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과 ‘평화옹호운동’을,
 - ‘친선’과 관련해서는 ‘국제주의적 원칙과 혁명적 의리’를 강조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생존과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의 유지를 도모함.
 - 그러나 ‘반제·자주’의 대외관과 ‘혁명·해방’의 대외정책 목표를 지속함으로써 근본적인 변화는 없음을 시사함.

1. 유인외교 전개

○북한은 김일성 사후 주변 4국과의 관계에 있어

- 대미 관계개선¹⁾(‘94.10.21 「북·미 기본합의문」 채택, 각종 후속 회담 추진)
- 대일 접근 및 적대 병행(‘95.3.30 「북·일회담 재개를 위한 합의서」 채택, 비공개 접촉 지속)
- 대중 관계강화(‘96.5.22 「북·중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고위급 교환 방문)
- 대러 관계복원(‘97.1.21~25 「북·러 신기본조약」 체결 협상, 경험 모색)을 추진하였음.

○북한은 이같은 유인외교를 통해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안정적 출범과 장기 지속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모색해 왔음.

1)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전통적인 「反美주의」를 「通美주의」로 전환, 대미관계 개선을 대외정책의 중심고리로 설정하고, 핵문제를 둘러싼 대미 갈등을 제네바합의(‘94.10.21)를 통해 대미관계 개선의 기회로 반전시킨 후, 대미관계 개선 의사를 지속적으로 천명하였음.

2. 안보외교 강화

○ 사회주의 진영의 전세계적 퇴조와 미국의 유일초강국화 현상에 따라 국제환경이 악화되자, 북한은 대중 동맹관계 지속과 대미 군사접촉 시작을 통해 안보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함.

- 북한은 '대를 이은 조중친선 강화' 강조('95.10.25)와 사상 최초의 중국군함 남포항 입항('96.7.11)을 통해 전통적 혈맹인 중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도모하였고,
- 또한 미국과는 미군유해송환협상('96.1 하와이, '96.5 뉴욕, 6.10~14 평양)과 미사일협상('96.4.20~21 베를린), 그리고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주장을 통해 미·북간 합법적 군사접촉 창구 개설을 모색하였음.

3. 도입정책 추진

○ '90년대 들어와 북한은 제3차 7개년경제계획의 실패에 따른 식량난·에너지난·생필품난·외화난의 4대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신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외부문으로부터의 도입정책을 활발히 전개하였음.

- 식량난 해소를 위해서는 식량원조 확보정책을,
-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서는 경수로(중유) 도입정책을,
- 생필품난 탈피를 위해서는 외자유치정책을,
- 외화난 타개를 위해서는 경제특구 활성화정책을 추진하였음.

Ⅲ.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 동향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은 「우리식 사회주의」체제 유지 및 김정일 승계체제 정당화를 위해 정권의 정통성·유효성·통제성·연대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²⁾

1. 정통성 강화 외교: 대미관계 개선 및 대외선전 지속과 ‘잠수함 사건’ 사과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을 대외정책의 중심고리로 설정, 각종 회담과 접촉을 통해 대미 접근을 강화, 관계개선의 발판으로 삼는 동시에 김정일 정권 정통성 제고의 초석으로 다지고 있음.

- 4자회담 공동선명회³⁾(’97.3.5) 참가

- 북·미 준고위급회담(3.7) 개최 및 김계관 부부장 워싱턴 방문(3.8~13)⁴⁾

-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단 방미⁵⁾(3.7~19)

2) 정당성(합법성: legitimacy)은 김정일 집권의 정당화를, 유효성(효율성: effectiveness)은 정권의 당면과제 해결을 통한 주민 지지도의 제고를, 통제성(강제성: coerciveness)은 강제기구를 통한 사회통합 유지를, 연대성(solidarity)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동맹국 및 주변국의 지지를 의미함. 허문영,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과 지속성,” (한국국제정치학회 발표논문, 1995.12.14), pp. 2~3.

3) 북한은 先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식량원조 조치, 後 4자회담 논의를 주장하였음.

4) 북한은 3단계별(10만톤, 50만톤, 90만톤) 대북 식량지원 보장시 4자회담에 참가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함.

5) 북한은 대미 인민외교 추진차원에서 ’89.4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주관회의에 기독교대표단을 참가시킨 이래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각종 기독교행사에

- 미군유해회담(5.4~9, 13 뉴욕) 개최⁶⁾

- 미사일회담 개최 예정

○북한은 김정일 및 김일성의 생일행사를 국내외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김부자 우상화 선전 및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고양과 공식승계 분위기 확산에 활용하였음.

- 김정일 55회 생일행사(2.16)⁷⁾시 약 40여개국에서 친북단체를 통해 경축준비위를 결성하여 경축모임을 진행하는 한편, 리비아·중국 등 7개국으로부터 생일축하단을 맞이함.

- 김일성 85회 생일행사(4.15)시 제15차 '4월의 봄 국제 친선예술 축전'을 개최하여 42개국('96년도는 30개국) 60여개단체 3,000여명을 맞이하고, 30여개국에서 경축준비위를 결성, 기념행사를 진행함.

○북한은 잠수함 사건('96.9)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비고의적 사건에 대한 사과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테러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참석케 하였고, 종교행사 명목하에 북·미 관계개선 분위기 조성과 대북투자 유치 및 식량지원문제 등을 주장해 왔음.

6) 북한과 미국은 금년중 3차례 공동발굴작업을 실시할 것과 1회 작업시마다 10.5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함.

7) '75년 휴무일, '82년 공휴일, '86년부터 2일간 연휴, '95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

- 북한 외교부대변인은 라빈 이스라엘 총리 암살사건('95.11.4)과 관련해서도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과 이에 대한 지원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95.11).
- 그러나 북한은 블라디보스톡 한국외교관 살해사건('96.10.1)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96년도 국제테러 분석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국제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였음⁸⁾('97.4.30).

○북한은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원회 진출을 추진하는 동시에, 77그룹에서 한국을 배제하도록 주장하였음.

- 북한은 유엔인권위, 여성지위위, 지속개발위 등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3개 위원회에 입후보('97.1.20)하고, 제52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사회) 부의장직 출마를 공식화하였음.
- 또한 북한은 한국이 개도국이 아니므로 77그룹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2.28).
- 이같은 북한의 외교행태는 유엔 산하기구의 대북지원을 유도하는 동시에, 한국의 OECD가입('96.12.12)을 계기로 제3세계 국가들의 모임인 77그룹에서 한국을 배제함으로써 동 그룹을 북한 지지세력으로 확보하려는 의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8) 테러지원국에게는 군수물자 거래와 미국 수출입은행의 보증, 최혜국 대우(MFN), 일반 특혜관세(GSP) 부여가 금지되고, 국제금융기관 대출이 규제됨.

2. 유효성 제고 외교: 도입정책 지속과 국제기구 진출 시도

○북한은 식량난 해소를 위한 식량원조 확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서 전방위 초청 및 방문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였음.

- 북한은 이같은 전방위 초청 및 방문외교를 통해 대외적 고립을 해소하는 한편, 무기수출과 식량지원 및 수입을 교환하고, 나아가 경제협력관계 수립 및 확대를 모색하였음.

- 국제기구 방북 초청

· WFP 사무국장, 홍수피해지역 답사 및 식량원조 양해문 채택('97.3.15~18)

· UNDHA 대표단, 2차 지원활동 및 3차 지원계획 협의(3.18~22)

- 또한 북한은 대북식량지원을 4자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음(4.16, 20).

○북한은 에너지난 극복을 위해 잠수함 사건으로 인해 일시 중단된 경수로사업을 재개하는 한편, KEDO 및 중국·러시아로부터의 원유도입을 적극 모색하였으나 실질적 성과는 미미한 실정임.

- 북한과 KEDO는 「경수로 공급협정」('95.12.15) 이행을 위해 「부지인수」 및 「북한의 KEDO에 제공할 서비스」 등 2개 의정서 협상에 공식 서명하였음('97.1.8).

- KEDO로부터 4.2만톤의 중유를 공급받음.

- 중국으로부터의 원유원조 도입계획물량은 130만톤이나, 중국의 외상거래 기피현상으로 인해 실질적 송유는 저조한 것으로 알려짐.⁹⁾

○북한은 외화난을 해소하는 한편 한·중관계 견제 및 대대만 관계 개선을 위해 대만 핵폐기물 반입을 추진하였음.

- 1단계에서는 향후 2년내 6만 배럴(배럴당 1,261달러)을, 2단계에서는 14만 배럴(배럴당 1,090달러)을 수송할 것과,
- 대만 원자력위원회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수송 개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만 핵폐기물 20만 배럴 북한 반입·처리 협정」을 체결하였음('97.1.11).

○북한은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노동기구(ILO) 등 주요 국제경제기구 가입노력과 더불어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세계식량계획(WFP) 등을 통한 차관·원조도입 활동을 전개하였음.

- 김정우(대외경협추진위원장)는 ADB와 접촉, 500만 달러의 가입분담금 납부용의와 상호방문을 제의('97.2.18)
- 북한은 IFAD 총재 등과 접촉, 양계사업을 위한 1,500만 달러의 차관제공을 요청(1.29, 2.25)
- 김형우(주UN대사)는 유엔에 제3차 수재지원 요청(2.14)
- 북한이 국제경제기구 가입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난 타개와 인

9) 북한과 중국은 「조·중경제 및 기술협조 협정」('96.5.22)에 따라 매년 곡물 50만 톤, 유류 130만톤, 석탄 250만톤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프라 확충 그리고 나진·선봉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여건 조성 차원에서 전개되는 것으로 보이나, 채무 불이행 등 국제적 신용 실추와 관련 법규 정비 등의 문제로 인해 조기 가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통제성 확보 외교: 봉남정책 지속

○북한은 남한 정권을 경제난 및 체제위기의 주원인 제공자로 규정함으로써 내부 체제통합을 강화하고 있음.

- 북한은 '현 남한 정권이 통일의지 및 남북관계 해결 의사가 없기 때문에 남한에게 기대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97년에도 당국간 대화를 배제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음.¹⁰⁾
- 북한의 남한배제정책은 잠수함 사건시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협상한 사례와 판문점 연락사무소 폐쇄('96.11.20)로 표출되었음.
- '97.1~5중 북한의 대남비방 방송의 횟수는 하루평균 18.9회로 작년 동기 14.9회보다 27% 증가하였음.¹¹⁾

○북한은 '95년 한국정부의 쌀 15만톤 지원시 일시 대남비방을 자제했으나, '97년에는 대한적십자사의 식량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남비방을 지속하였음.

10) '97년 신년공동사설

11) 통일원, 「북한의 대남비방 선동동향」(1997.6.4).

- 이는 체제유지를 위해 남북 당국대화는 거부하되, 경제활성화와 통일전선사업의 강화를 위해서는 비당국간 대화에 적극적 태도를 취하는 정·경분리적 대남적대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북한은 경제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의 제1차 경제제재 완화조치('95.1) 이후, 북한은 북·미 준고위급회담(3.7) 및 김계관의 비공식 워싱턴 방문(3.8~13)과 뉴욕방문(4.16)을 통해 미국내 동결자산 해제 및 미국기업의 대북 투자허용, PL480에 의한 식량지원 등의 추가적인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4. 연대성 보장 외교: 유인정책 강화

○대미관계에 있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을 체제유지의 중심고리로 파악하고, 다양한 협상채널을 개척하여 이를 진행시키고 있음.

- 정치부문에서는 4자회담 공동설명회('97.3.5)에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와 북·미 준고위급회담(3.7)을 개최하여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 경제부문에서는 대북 곡물지원문제와 제2단계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와 경수로 사업문제를,
- 군사부문에서는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문제와 미사일 수출 및 개발문제를,
- 사회·문화부문에서는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단 방미와 미국의 고위 민간인의 대북 초청과 같은 인민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대일관계에 있어, 북한은 비공식 과장급 접촉을 진행함으로써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은밀히 전개하고 있음.

- 벳쇼 외무성 동북아과장과 이철진 외교부 일본과장 회담 ('97.4.19 북경)
- 일본은 여중생 납치의혹, 일본인처 모국방문 허용, 노동1호 배치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북한은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과 수교교섭 재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

○대중관계에 있어, 북한은 한·중수교('92.8)와 황장엽 사건('97.2.13) 처리과정에서의 중국태도¹²⁾에 실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를 위해 순망치한의 전통적 친선관계를 지속하는 동시에, 대미관계 및 대대만관계 진전을 통해 중국의 대북접근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2) 중국 唐家璇 외교부 부부장은 “한반도 전쟁시 중국의 자동개입은 냉전적인 사고로서 그러한 상황은 생각할 수 없다”고 발언함. 『조선일보』, 1997.3.21.

- 등소평 사망관련 김정일 조건 발송('97.2.20)
- 대만의 대북지원(쌀 2,000톤, 농업기술요원 파견 등 '97.3.29)
- 중국의 7만톤 식량 대북 무상원조 결정

○대러시아관계에 있어, 북한은 정치·경제·군사적 관계 회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북·러 우호 선린 및 협력에 관한 조약」 체결 협상(이인규 부부장·카라신 외무차관, '97.1.21~25) 및 「상호여행에 관한 협정」 조인(1.24)
- 「과학기술협력 의정서」('97.4), 「항공운수 협정」('97.5) 체결
- 러시아제 MIG-29 도입 합의(러시아 대외경제부 대표단; 단장 체니코프 대외경제부 차관, 2.21~27)

IV.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향후 김정일 정권의 대외 정책 전망: 실리중시적 외교의 추진

1. '3대혁명역량' 편성 상황

○ 현재 북한에서는 20년 이상에 걸친 후계체제의 구축으로 인해 비록 안정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식량난·경제난 등에 따른 불안정 요인도 점증하고 있는 바,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은 약화되는 추세에 있음.

- 상징조작과 사상사업의 강화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은 제고되어 왔으나, 황장엽 망명사건은 북한당국의 대내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계층뿐만 아니라 복잡계층에서 핵심계층에 이르기까지 충격을 준 것으로 분석됨.
- 경제적 효율성의 경우 제한적 대외경제개방정책과 3대제일주의(농업, 경공업, 무역)의 지속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 및 경제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사회적 통합성의 경우 김일성 사망 이후 비록 군부 우대의 비상위기관리체제와 회유 및 강제정책을 통해 사회통합을 강화해 왔으나, 경제난의 심화에 따른 사적 경제활동의 증가와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탈북자의 증가 등의 사회일탈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

○남한에서는 문민정부의 말기에 들어와 각종 부실상황이 전면에 나타나게 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이 만연하게 되었고 그 결과, 북한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른바 ‘남한 혁명역량’이 제한적이거나 회복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것임.

- 한보사건과 삼미부도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불황,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의 증폭 등으로 표출되는 개혁정책의 좌절은 금년 말로 예정된 대권경쟁과 맞물려 국가불안정 상황을 연출하고 있음.
- 또한 남한사회는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대북지원에 부정적인 보수주의, 조건부 지원을 표명하는 자유주의, 전면 지원을 강조하는 급진주의적 여론 사이에서 분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및 국제정세와 관련해서는 미·일·중·러 주변 4국의 상호견제적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은 아직 미미한 실정인 바, ‘국제혁명역량’ 또한 약화일로에 놓여 있는 상황임.

- 북·미, 북·일 관계개선 지연과 북·중 긴장관계 지속

○이같은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해 북한지도부는 체제유지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정세관을 보여주고 있음.

- 김정일은 식량·경제난과 안보난에 대한 위기감¹³⁾을 표출하고 있고, 북한지도부는 '97년 실천과제와 정책방향으로 '총돌격전, 3대진지강화론'¹⁴⁾을 제시하였음.

13) 김정일, “비공개 연설(1996.12.7),” 「조선일보」, 1997.3.19.

2. 김정일 정권의 대외정책 전망: 개혁없는 개방정책

○ 앞의 논의를 총괄할 때, 북한은 비록 남한혁명역량이 다소 회복된다 할지라도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지도부 또한 현실타협적 정세인식을 보다 많이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북한은 대외관계에 있어 과거보다는 유화적인 개방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황장엽 망명사건을 고려할 때,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안정과 체제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근본적 개혁없는 개방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국가목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3대혁명역량이 회복될 때까지 비록 '혁명과 해방'에 대한 비중은 다소 낮출지라도 정권안보에 대한 비중은 여전히 높게 설정할 것으로 보임.

○ 대외정책 이념과 관련하여 '자주·평화·친선'은 지속하되, 그 내용의 강조점에 있어서는 보다 현실적응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자주이념과 관련하여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되,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 연대성 강화'는 더욱 강조함으로써 비동맹국가와의 관계발전 및 남남협력을 강화할 것임.

14) "위대한 당의 영도따라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아가자," 「로동신문」, 1997.1.1.

- 평화이념과 관련하여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과 군축 등을 강조함으로써 대미관계 정상화의 속도와 폭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정하고자 할 것임.
- 친선이념과 관련하여 비적대 서방국과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치외교적·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정당화할 것임.

○ 대외정책면에서는 개혁없는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임.

- 북한은 주변국가들의 대북 체제보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호견제적 영향력확대 경쟁을 심화시키는 유인외교와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제한적 경제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김정일 정권의 정치·군사적 부문의 대외정책은 김일성 시대의 「자주외교」보다 정권수호적 실리추구 성향이 높다는 점에서 「주체외교」로 명명할 수 있을 것임.
- 김정일 정권은 이데올로기 중시적 혁명외교보다 현실중시적 실리외교를,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 해방외교보다는 김정일 정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호외교를,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했던 진영외교보다 서구를 포함한 모든 나라와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전방위외교를,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국익을 추구했던 시계추외교에서 주변 4국을 포함한 기타국가들까지 끌어들이면서 국익을 추구하는 유인외교로 정책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됨.

- 경제: 주체형 대외개방정책 확대
 - 자주형 자력갱생 경제발전노선(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정책, 중공업우선정책, 군사·경제 병진정책)에서 주체형의 대외개방 경제발전노선(경공업 우선정책, 대외무역 우선정책 강조, 그러나 자립경제와 병진정책 지속)으로의 전환 적극화

○대주변 4국정책¹⁵⁾과 관련하여 먼저 대미관계에 있어 북한은 접근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⁶⁾

-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연락사무소 개설로 상징되는 관계개선은 조속히 성사시키려 할 것이나, 미사일 수출 및 개발 포기의 어려움과 자유화 바람유입에 따른 체제불안정화 가능성을 의식하여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대사관 승격 등 관계 정상화는 서두르지 않을 것임.
- 따라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대미관계 개선 속도 조절수단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정권유지를 위한 내치용 선전수단으로, 장기적으로는 대미 협상 목표로 활용할 것임.

15) 북한은 「1996년도 대외활동 방향」에서 대주변4강 정책으로서 대미관계 개선을 통한 일본 및 서유럽 자극, 대일 고자세, 대중 전통적 친선관계 유지, 대러 접근유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동남아국가들과는 경제협력, 비동맹 국가들과는 연대성 강화를 강조하였다고 함. 「전북한 외교관 증언」, 1997.5.29.

16) '97년 북한은 대미관계를 4자회담 공동선언회 개최, 북미 준고위급회담 개최, 대북 식량지원 실시확보, 제2차 미군유해 발굴 및 송환작업 재개, 제1단계 미사일협상 재개, 제2단계 대북 경제제재 해제, 4자회담 개최, 연락사무소 개설 순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임.

○대중관계에 있어 북한은 전통적 동맹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북한은 체제안정 및 경제원조 획득과 대미·일관계 개선과정에서의 유리한 협상입지 확보를 위해 최대 후원국인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임.
- 그러나 한·중 수교와 북·미 관계개선으로 북·중간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구조가 존재하는 바, 북한은 대중관계 지렛대로서 '대만 카드'를 활용할 것임.

○대일관계에 있어 북한은 접근정책과 강경정책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됨.

- 김정일 정권은 대미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쌀 외교와 일본인처 고향방문 등 인민외교에서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되, 수교회담 재개협의 등 정부간 협상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됨.
- 단 '98년 남한의 신정부 출범 이후 대일관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나진·선봉 특구 활성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일 경험에는 적극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대러관계에 있어 북한은 친선관계 회복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군사력 편제와 경제구조에 있어 상당부분 러시아 의존적인 북한으로서는 대한반도 균형외교정책을 추진하려는 러시아의 외교정책 전환에 부응하는 것이 정치·군사 및 경제적으로 유익할 것이기 때문임.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研究報告書〉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 96-16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 96-18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96-19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관계
-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 96-27 한·일 안보협력 방안 연구
-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 96-29 한·중 안보협력 방안 연구

〈統一情勢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 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 96-08 日本總選 結果分析
- 96-09 美國 大統領 및 議會 選舉 結果分析
- 97-01 대만核廢棄物 북한搬入의 問題點
- 97-02 鄧小平사후 中國의 內정과 한반도정책 전망
- 97-03 최근 북한의 對外정책 동향과 전망

〈年例情勢報告書〉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論叢〉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統一研究論叢 第5卷 2號(1996.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1996)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96-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북한인권백서 1997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 동향과 전망

統一情勢分析 97-03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FAX : 235-5270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7년 6월 일

發行日 1997년 6월 일
